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3면	시도의회의장협 임사회	1
연합뉴스		시도의장협의회, 지역 제한입찰 한도 100억→150억 상향 ...	2
매일일보	온라인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	3
江原日報	02면	“동해선 고속철 단절구간 조기 착공하라”	4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동해선 삼척~강릉 조기 착공 촉구”	4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도의회,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조기 착공 촉구	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춘천 기업혁신파크 강원발전 마중물 돼야"	6
노컷뉴스	온라인	강원도의회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조기 착공' 촉구	7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기업혁신파크 투자 유치·정주여건 조성 총력"	8
G1방송	온라인	민간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문제 없어"	8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 운영	9
江原日報	02면	“道 농업인 지원사업 투자 더 늘려야”	9
대한방송	온라인	‘홍천 거리농경문화’상설 체험장 조속 건립 촉구	10
news 1	온라인	“‘홍천 거리농경문화’ 상설체험장 조속 건립해야”	11
강원네트워	온라인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	12
이코노믹포	온라인	강원도의회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	13
매일일보	온라인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4
CBS	온라인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도 현안 도로, 국가계획 반영' 앞장	15
江原日報	13면	하늘내린 농업인대학 입학식	16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양숙희 도의원	16
江原日報	21면	[동정] 양숙희 도의원(춘천)	1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6
강원도민일보	02면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 성공...정부 공모사업 절반 따냈다	17
강원도민일보	02면	도감사위, 최문순 전 지사 업무상 배임혐의 수사 의뢰	17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 학생들이 올해 메디컬 계열 진학 늘었다	18
강원도민일보	05면	'눈·비가 효자' 올 들어 도내 산불 0건...농업용수도 넉넉	18
강원도민일보	09면	민선8기 마지막 퍼즐 '국제스케이트장' 남았다	19

江原日報	02면	영월~삼척 고속道 예타 통과 청신호	19
江原日報	10면	춘천에 軍자녀 자율형공립고 생기나	20
江原日報	11면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실마리 찾았다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장성광업소 원형 보존 타당하다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외국인 ‘동반자’로 인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글로벌대학 예산 '쫄꼼 지원' 안돼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환자 뒷전인 ‘醫·政’ 갈등,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24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3일 (수)

인물 23면



시도회의의장협 임시회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2차 임시회가 12일 세종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권혁열 도의회 의장과 시도회의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제공=도의회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시도의장협의회, 지역 제한입찰 한도 100억 →150억 상향 건의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1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 발주 종합공사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중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역 제한입찰은 지자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은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을 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종합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2009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종합공사 한도금액을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건의안은 국회와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다.

권 의장은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2024년 03월 12일 (화)

전국

매일일보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황경근 기자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제공=도 의회)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등 13개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 △지방계약법령상 1인 건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당면 현안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 채택됐다.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종합공사비를 현실화 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이후 개정된 바 없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종합공사 한도’를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 촉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1인 건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지방계약법령상 1인 건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과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및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건의안, 농어촌 고령화 현실을 고려한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원안가결 됐다.

그 밖에도,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을 비롯한 전체 13개 상정안건이 원안가결 됐다.

권혁열 의장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지방소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마주한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이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룸, 엔사이드 등 47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종합 02면



“동해선 고속철 단절구간 조기 착공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2일 의회 현관 앞에서 동해선 고속화 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의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박승선기자

KBS 춘천

2024년 03월 12일 (화)

강원

강원도의회 “동해선 삼척~강릉 조기 착공 촉구”



강원도의회는 오늘(12일) 지역 균형 발전과 내륙 물류 운송 통로 확충을 위해, 동해선 고속화 철도 단절 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의 조기 착공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은 노후와 선형 불량 등으로 시속 6~70km로 운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설 개량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순정 flyhigh@kbs.co.kr

MBC 강원영동

2024년 03월 12일 (화)

강원

강원도의회,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조기 착공 촉구

홍한표



강원도의회가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인 삼척~강릉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내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동해선은
환동해 경제벨트의 핵심 철도망으로
육상물류 운송에 최적 통로라며
조기 착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최재석 강원도의회원이 단독 발의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관련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24년 03월 12일 (화)

강원도민일보

정치

강원도의회 "춘천 기업혁신파크 강원발전 마중물 돼야"

동해선 고속화철도 삼척~강릉 조기 착공 건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326회 임시회가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서영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전담부서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재차 나왔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생산성 확보와 인구 유지의 근간이 되는 청년층 및 젊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강원을 외면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강원도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유지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상북도의 경우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한 바가 있다"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뿐 아니라 '경북형 비자센터' 설치와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외국인정책 전담부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원 4명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인력 확충을 당부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정과 관련 "투자기업 유치, 춘천 도심지와의 접근성 개선, 유입인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춘천시만의 영광이 아닌 강원도 전역으로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만 한다"고 했다.



▲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이 326회 본회의 산회 후,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인 삼척~강릉 조기 착공' 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영김용래(강릉) 의원은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설치를 요청하며 "영동지역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밀도있게 수행하기 위해선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유미(원주) 의원은 "현재 강원도만의 특색을 반영한 신중년 일자리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중년의 업무 전문성과 지역 특색을 연계해 인재를 찾아내고, 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홍성기(홍천) 의원은 두 마리 소가 거리쟁기를 끌며 논밭을 가는 거리농경과 노동공동체 조직을 의미하는 '거리농경문화'를 두고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홍천 거리농경문화를 시연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등을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강원도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을 두고 "강원도와 시·군 분담비율 15대 35(나머지 자부담)가 아닌 35대 15로 도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500억 수준을 넘어선 2000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326회 본회의 산회 후,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인 삼척~강릉 조기 착공' 건의문을 발표했다.

노컷뉴스

2024년 03월 12일 (화)

사회

강원도의회 '동해선 삼척-강릉 구간 조기 착공' 촉구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착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2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인 삼척~강릉 구간의 조기착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을 통해 "동해선은 환동해 경제벨트의 핵심 철도망으로 동북아시아 중심지 도약을 위한 육상물류 운송에 최적 통로 역할을 할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수도권과 강원영동지역, 영남지역 간 내륙물류 운송 최적 통로로의 역할도 톡톡히 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심영곤(삼척)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인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의 조기착공에 계속해서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애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명성일보, 누리일보 등 70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3일 (수)

종합 02면



임미선 의원 최승순 의원 김용래 의원 박윤미 의원 홍성기 의원 진종호 의원

도의회 “기업혁신파크 투자 유치·정주여건 조성 총력”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투자기업 유치, 유입 인구의 정주여건조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강원도가 외국인정책 전담 부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원 4명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래(강릉) 의원은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설치를 요청하며

“영동지역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윤미(원주) 의원은 “업무 전문성과 지역 특색을 연계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중년 정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성기(홍천) 의원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흥천 겨리 농경문화를 시연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등을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종호(양양) 의원은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의 도와시·군 분담비율에서 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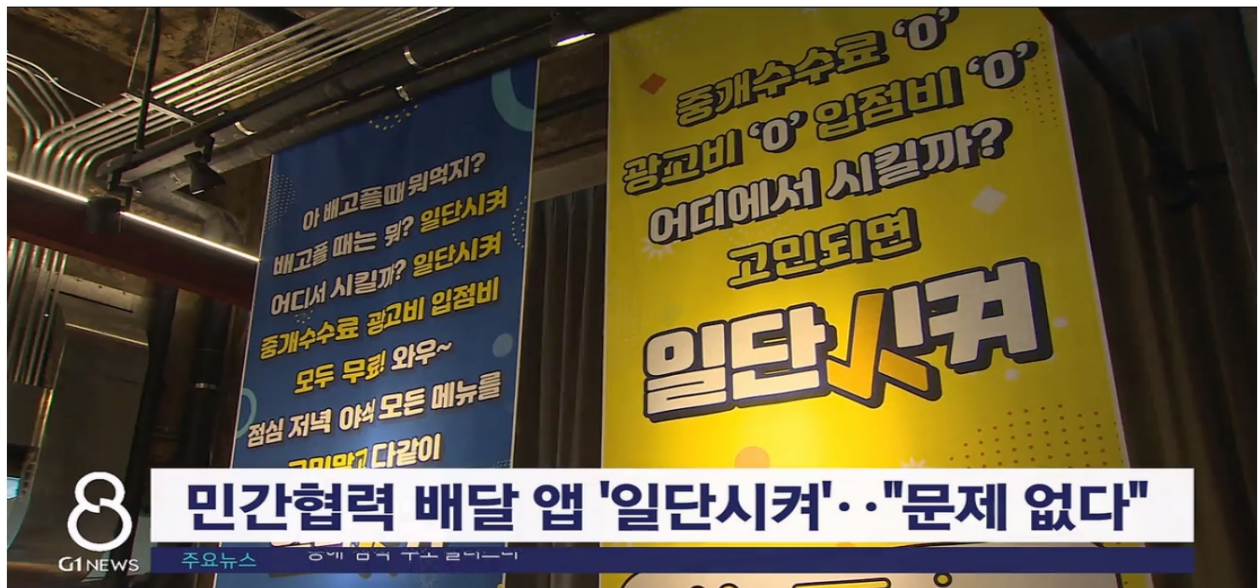
G1방송

2024년 03월 12일 (화)

강원

민간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문제 없어"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가 감사 청구한 민간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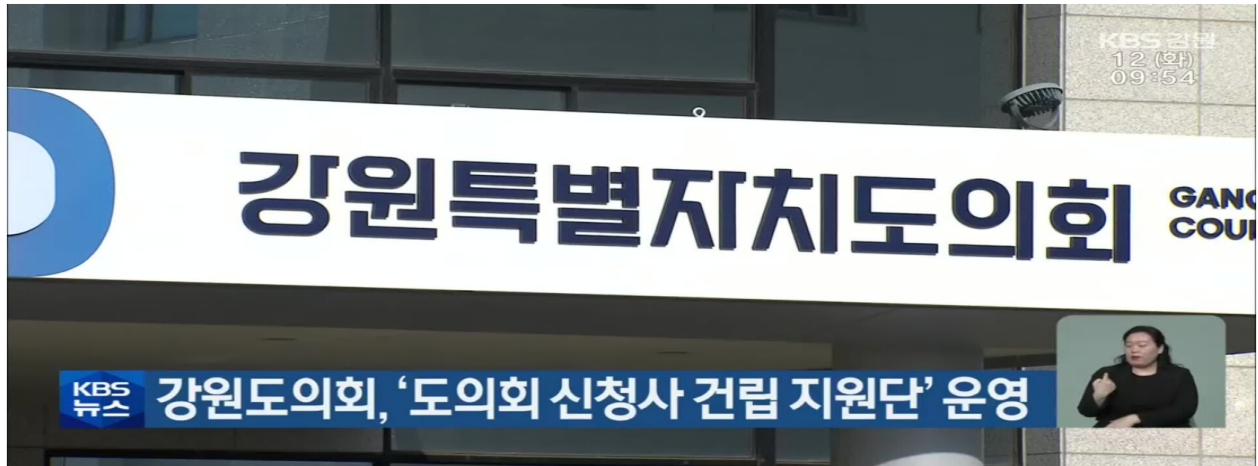
앞서 강원자치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단시켜 운영 업체 선정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춘천

2024년 03월 12일 (화)

강원

강원도의회,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 운영



강원도의회가 청사 신축 이전에 대비하기 위한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을 어제(1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단은 도의회 청사 설계 지침 작성과 사무 공간 배치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합니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청사에 대한 구상을 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2028년까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동반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2024년 03월 13일 (수)

종합 02면

江原日報

“道 농업인 지원사업 투자 더 늘려야”

도의회 5분 자유발언

국민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진중호(국민의힘·양양) 의원은 “농업인수당,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에 도가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현행 반값농자재 도와시·군 분담 비율을 15%대 35%가 아닌 35%대 15%로 하는 등 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중년 일자리정책을 촉구한 박윤미(더민주·원주) 의원은 “신중년 세

대는 전문성이 무르익었지만, 퇴직 후에 낮은 임금으로 부양 의무를 지고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통합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청년층 및 젊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원을 외면해서는 미래가 암울하다”며 “정부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도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원연구원 영동분원 설치 제안도 나왔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영동, 영서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될 것”이라며 “연구원들이 영동지역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밀도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기(국민의힘·홍천) 의원은 ‘홍천 거리농경문화’의 보존·계승과 관광자원화 방법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보존회 측에 지원하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인상과 함께 거리 농경문화를 시연하고 농기구를 전시할 전수교육시설 건립을 주장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투자기업 유치, 춘천 도심지와의 접근성 개선, 유입인구 정주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폐회한 도의회는 다음 달 16일 32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4년 03월 12일 (화)

대한방송

정치

‘홍천 거리농경문화’상설 체험장 조속 건립 촉구

— 홍성기 의원, 강원자치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위해선 전수교육 용도 상설 체험장 확보 중요” —



지난 2021년 5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 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홍천 거리농경문화’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은 물론,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을 위한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은 3.12일(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 무형문화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를 통틀어 사람과 가축인 소가 주체가 되어 소통하는 농경문화 방식의 무형문화재는 ‘홍천 거리농경문화’가 유일하다”면서 “그 만큼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과 고유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거리농경이란 두 마리 소가 거리쟁기를 끌며 논밭을 가는 농경 문화를 일컫는다”면서 “나아가 ‘거리농경문화’는 거리소를 이용한 경작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소모는 소리를 중심으로 거리 연장을 제작하거나 노동공동체 조직 등을 포괄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3월 현재 ‘거리농경문화보존회’에는 총 10명의 전승자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보존회 측은 매년 한 차례 ‘홍천 거리농경문화 공개 행사’를 통해, 거리소 전통 발갈이를 비롯한 거리소 모는 소리 시연 및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보존회 측에 매달 무형문화재 전승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리 소 두 마리에 대한 사료비 등 사육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면서 “‘홍천 거리농경문화’의 경우 사람과 소가 주체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보존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리 소 사육비를 따로 책정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와 함께, “‘홍천 거리농경문화’를 시연하고 관련 농기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을 갖추는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 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기 의원은 특히, “광역지자체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수교육시설 건립이 가능한 만큼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강원의 무형문화 자산인 ‘홍천 거리농경문화’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승격되어 강원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중희 기자

news 1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홍천 거리농경문화’ 상설체험장 조속 건립해야”

도의회 5분 자유 발언서 보존회 측 예산지원 저조 지적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도의의회 제공)/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중 하나인 ‘홍천 거리농경문화’의 상설체험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홍성기 도의원(홍천)은 12일 “‘홍천 거리농경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은 물론,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을 위한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리농경이란 두 마리의 소가 거리쟁기를 끌며 논밭을 가는 농경문화를 말한다. ‘홍천 거리농경문화’는 2021년 5월 강원도 무형 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됐다.

국가무형문화재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를 통틀어 사람과 가축인 소가 주체가 돼 소통하는 농경문화 방식의 문화재는 ‘홍천 거리농경문화’가 유일하다.

홍 의원은 “‘홍천 거리농경문화’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과 고유성, 대표성의 가치가 뛰어나다”며 “강원도는 보존회 측에 매달 무형문화재 전승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거리 소 두 마리에 대한 사료비를 충당하는 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천 거리농경문화의 경우 사람과 소가 주체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보존회의 재산으로 돼 있는 거리 소의 사육비를 따로 책정해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현재 ‘거리농경문화보존회’는 총 10명의 전승자로 구성돼 있다. 보존회 측은 매년 한 차례 공개 행사를 통해 거리소 전통 발갈이를 포함해 거리소 모는 소리 시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 그는 국가 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을 위해서는 전수교육시설 용도의 상설체험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고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홍천 거리농경문화를 시연하고 관련 농기구를 전시할 수 있는 전수교육시설 조성은 필요하다”며 “광역지자체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국가 예산 지원을 통해 전수 교육시설 건립이 가능한 만큼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시사일보 등 37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3월 12일 (화)

강원네트워크

강원

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 사후 관리 지원계획 수립 ▶사업 완료 및 완료 예정지역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 사업, 주민 교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시·군 39개소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조 73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6개소 사업이 완료되었다.

최재석 의원은 “사업 완료 이후 시설 방치나 거점 공간 운영 관리 미흡 등으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재식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2024년 03월 12일 (화)

이코노믹포스트

경제

강원도의회 "최재석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석균 부장



최재석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재석(국민의힘, 동해1)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 사후 관리 지원계획 수립 △사업 완료 및 완료 예정지역의 교육 및 컨설팅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 사업, 주민 교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 △지원받은 사업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이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시·군 39개소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1조 73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6개소 사업이 완료되었다.

최재석 의원은 “사업 완료 이후 시설 방치나 거점 공간 운영 관리 미흡 등으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시의 재식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이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P

lsg@economicpost.co.kr

누리일보, 뉴스줌 등 35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3월 12일 (화)

매일일보

전국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장 방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
획 반영 건의

황경근 기자



12일,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이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 지역 핵심사업 요청(제공=도 의회)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은 12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정의경 청장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교통연계를 위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6~'30) 건설계획에 지역 핵심 건의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건의사업들은 수도권 교통망 확장과 연계한 영서지역 접근성 향상, 동·하계도 방문객 집중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 지역 생산품(농·수·공산) 물류비용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간선도로 인프라”로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6~'30)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5년마다 도로건설 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3년 4월에 도에서 건의사업을 제출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등 후보사업 선정(국토연구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KDI 수행)를 거쳐 25년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도에서 건의한 사업현황은 17개 시·군 41개소 330.8km, 5조 5485억 원으로서 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가 29개소 L=236.5km 4조 5860억 원, 국가지원지방도가 12개소 L=94.3km 9625억 원이다.

CBS

2024년 03월 12일 (화)

강원

박기영 강원도의회 '강원도 현안 도로, 국가계획 반영' 앞장

강원CBS 진유정 기자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12일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제6차 국토·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지역 핵심 건의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강원도의회 제6기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12일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간 교통연계를 위한 제6차 국토·국지도 5개년(2026년~2030년) 건설계획에 지역 핵심 건의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건의사업들은 수도권 교통망 확장과 연계한 영서지역 접근성 향상, 동·하계도 방문객 집중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 지역 생산품(농·수·공산) 물류 비용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간선도로 인프라로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제6차 국토·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5년마다 도로건설 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 해 4월 강원도에서 건의사업을 제출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타당성 검증 등 후보사업 선정(국토연구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후 기재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KDI 수행)를 거쳐 내년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강원도에서 건의한 사업현황은 17개 시·군 41개소 330.8km, 5조 5485억 원이다.

강원CBS 진유정 기자

엔사이드, 명상일보 등 33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지역 13면



하늘내린 농업인대학 입학식 하늘내린 농업인대학 입학식이 12일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입학생과 이춘만 인제군의장 및 군의원, 엄윤순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3일 (수)

인물동정 09면



양숙희 도
의원은 13
일 오후 3
시 서울한
국프레스

센터에서 열리는
2024 우수 국회의원
및 지자체 의정대상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인물동정 21면

◇양숙희도의원(춘천)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
국프레스센터
에서 열리는
2024 우수 국회

의원 및 지자체 의정대상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3일 (수)

인물동정 16면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 13일
오후 6시
30분 속초

시한국자유총연맹속
초시지회에서 열리는
속초시지회 3월 월례
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 성공...정부 공모사업 절반 따냈다

2024년 03월 13일 (수)

종합 02면

민선8기 강원도정 성적표



민선8기 강원도정이 정부 주요 공모사업 27건 중 13건을 확정하는 등 335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춘천 유치까지 최종 확정되면서 국비 지원과는 별개로 오는 2033년까지 총 9364억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가시화됐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취임 이후 27건의 정부 주요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12일 기준, 13건의 공모사업을 가져왔다. 국비 확보 규모는 3352억 8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표적인 주요 공모사업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원민생토론회에서 전격 발표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포항시와 순천시를 제치

27건 중 13건, 국비 3352억원 확보

춘천 신성장동력 경제효과 6조원

글로벌대학 선정 5년간 1000억원

윤 대통령, 첨단산업 지원 약속

고 공모사업 유치를 확정지었다. 6조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와 4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강원도와 춘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대학30 육성지원 공모사업 선정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방대 30곳에 총 3조원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선별해 정부가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한다. 국내에선 한림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학교가 선정됐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정부 공모사업도 대거 따냈다. 이중 미래차 전자

부품·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사업과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강원형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인재양성과 테스트베드, 부지조성을 강원 반도체 산업의 3대 요소로 꼽고 있다. 미래자동차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생산·설계 기업들이 이들 센터 인근에 이전해 산업 집적 효과가 예상된다.

도는 올해 11건의 국가 주요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앞냈다. 파급력이 큰 사업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다. 특화단지에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비용 지원과 세제·예산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이 이뤄진다. 윤 대통령이 강원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한 만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총 12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곳)·소부장 특화단지(5곳) 가운데 강원도 지역은 전무했다.

김덕형

강원도, 정부공모사업 확정 및 진행현황

사업명	선정 및 발표시기	국비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정	9364억원 (투자액 기준·국비 미정)
글로벌대학30 육성지원	"	1000억원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	753억 500만원
투자선도지구	"	34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	260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228억원
씨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	150억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	150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	150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	140억원
전기차 제조회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	100억원
지역활력타운	"	60억원
바다숲 조성	"	21억 8400만원
2024 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 개최	3~4월 초	미지정
퀀텀 플랫폼 구축사업 공동연구기관 공모	3월	5억원
계획공동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6억원
수요맞춤형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 지원기반 구축	4월	9800만원
미래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	20억원
산업혁신 인재성장 지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	150억원(대학별)
2024 디지털 혁신거점	"	63억원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력	6월	50억원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상반기	미정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	"	100억원(잠정)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	18억 1050만원
해양자원형 국제관광도시비트	하반기	250억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미신청	45~85억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지원	"	164억 1700만원

강원도민일보

도감사위, 최문순 전 지사 업무상 배임혐의 수사 의뢰

R&D 사업 특정기업 특혜 의혹

강원연구원 예산 집행 부적정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문순 전 도지사와 강원연구원을 각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은 12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54회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도감사위는 최 전 지사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무연탄 활용 R&D 기술 개발 실증사업 공모 단계에서 도청 직원에게 특정 업체의 기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 결과 조사돼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도청이 최 전 지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동해 망상1지구 특혜 의혹과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도감사위는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18억원의 재정 손실이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도청 국장

2024년 03월 13일 (수)

종합 02면

1명과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실무자 2명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무연탄을 활용한 청정수소 추출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최 전 지사에 대해선 비촉무연탄 관리기금 조례를 부적정하게 개정한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에 대한 도감사위의 특정 감사에선 소속 연구위원들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회의 개최 계획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물품을 구입할 때 시장 가격과 비교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총 7억 여원의 예산 유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회의비와 보고서 제작비 물품 구입비 등 연구원 예산 집행 내역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강원 학생들 올해 메디컬 계열 진학 늘었다

도교육청 대학 진학 결과 발표

의·치·한의·약대 입학 13명 증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학진학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메디컬 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2일 '2024학년도 대학진학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도내 일반고 84곳과 강원과학고 등 특목고 4곳, 민사고를 합쳐 총 89곳, 9826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대상 학생 수

(1만528명)와 비교하면 702명 줄었다.

분석 결과, 학생 9826명 중 7968명이 대학에 입학해 진학을 81.1%를 보였다. 대학별 등록 학생은 4년제 대학 7009명, 전문대학 959명이다. 4년제 진학 비율(71.4%)은 지난해(68.4%)보다 3%p 올랐다. 의대(46명)·치대(14명)·한의대(8명)·약대(18명)는 올해 총 86명이 진학, 전년(73명) 대비 13명 늘었다. 의·치·한·약 각각 진학 인원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서울 주요대 7곳에 진학한 학생은 264명(2.68%)으로 지난해

2024년 03월 13일 (수)

종합 04면

(2.6%·274명)와 비교해 비율이 소폭 올랐다. 수도권 주요대 20곳에 진학한 도내 학생은 815명(8.29%)으로 파악돼 전년(6.99%·736명) 대비 숫자와 비율 모두 상승했다. 포항공대·KAIST·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 11곳에 입학한 학생은 5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명 늘었다. 강원도내 대학에 진학한 숫자는 3561명(36.2%)으로 확인돼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강원 학생 중 절반(50.8%)은 지역에 남았다. 수도권 대학 등록 학생(1741명) 비율은 24.8%로 집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강원 학생들의 대입 결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89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눈·비가 효자' 올 들어 도내 산불 0건...농업용수도 넉넉

2024년 03월 13일 (수)

사회 05면

전국 42건 대비 도내 전무

3~4월 대형산불 집중 긴장

297곳 저수율 96% '안정적'

눈·비온날 25.4일 252% 증가

2022년 영동지역에 32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산불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 강원도내에서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겨울 유독 많이 내린 눈과 비가 봄철 산불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봄철 대형산불이 집중돼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부터 이 날까지 전국 42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강원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올 겨울 전국적으로 겨울 눈·비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줄은 것도 감안해야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8건, 2022년 28건 등 매년 봄 산불 진화에 진땀을 뻘 강원도는 이번 겨울 눈·비에 큰 덕을 보고 있다. 이날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297곳의 저수율도 평균 85.2%를 훌쩍 넘는

96.2%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겨울철 도내 눈과 비가 내린 날은 25.4일로, 강수량은 277mm를 기록해 평년 강수량(87.6mm) 대비 252.8% 늘었다. 산림직 공무원 김모(27)씨는 "이번 겨울 많은 눈이 온 탓인지 다행히 산불 발생은 없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도는 겨울이 끝나고 3월과 4월 대형화재가 집중돼 왔다.

최근 10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100ha) 14건 중 9건(64%)이

3~4월에 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강원도내 발생한 산불은 모두 28건으로, 당시 겨울철(2021년 12월~2022년 2월) 내린 눈·비 횟수가 연평균 겨울철 강수량(19.2일)보다 크게 적은 11.8일로 '따뜻 겨울'이었던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 시기 강릉·동해, 영월, 삼척에서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이 발생해 320억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 겨울 눈·비가 봄철 매년 봄

발생하던 막대한 재산피해도 막아준 셈이다.

도산불방지센터는 내달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13일 강원도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4~0도, 산지 -7~-4도, 영동 -1~2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11~13도, 산지 6~8도, 영동 14~15도로 예보됐다. 신재훈 ericjh@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3일 (수)

지역 09면

민선8기 마지막 퍼즐 ‘국제스케이트장’ 남았다

육 시장 ‘잃어버린 춘천’ 되찾기

이달 말 현지실사 내달 발표

“시민열망 뜨거워...유치 최선”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육동한 춘천시장이 내세운 ‘잃어버린 춘천’의 마지막 퍼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육동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춘천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다. 춘천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이지만 굵직굵직한 현안에서 줄곧 고배를 마시면서 이렇다 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평가다.

육동한 시장이 내세운 ‘잃어버린 춘천’은 태권도와 빙상, 교육 그리고 기업도시다. 민선8기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와 기업혁신파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뛰어들어 이유도 때문이다.

춘천시는 지난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에 나섰으나 전북 무주에 석패했다. 당시 춘천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강원도의 명분에 밀려 태권도 공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춘천 유치를 확정하면서 태권도의 주도권을 다시 춘천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분야 역시 교육발전특구로 시범지정되면서 춘천형 교육모델 구축에 속도가 붙었다. 기업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춘천시는 혁신도시 유치 실패의 책임이 강원도에 있다며 규탄대회까지 개최했으나 20여 년이 지난 후 원주시와의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 11일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대상지로 선정되자 육동한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19년 전 기업도시가 춘천이 아닌 다른 도시로 간 사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그동안 우리 춘천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어떤 결과가 있어왔는지 시민들께서도 뼈저리게 실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적,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구마저 크게 역전당하며 과거 수부도시의 명성이 바래져 왔다”고 했다.

마지막 남은 현안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다. 춘천시는 지난달 대한체육회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신청서를 냈다.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공모에 뛰어들었으며 이르면 이달 말 현지실사에 이어 내달 최종 제안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춘천시관계자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춘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종합 02면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통과 청신호

속보=강원 남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6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직접 약속한 데다 동해~삼척 수소 클러스터 등 신규 사업의 영향으로 예타 막판 사업성도 개선된 것으로 전해져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본보 12일자 1면 보도)에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

KDI 6월 결과 발표...도 신규사업 반영되면 사업성 향상

윤 대통령 “사업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 언급

겠다”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고 강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5월 착수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결과는 당초 올해 3월 중 발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KDI는 최근 예타 결과를 6월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예타 기간 연장은 오히려 강원도

에 득이 됐다. 사업비 3,100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지난해 연말 예타를 통과해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사업성 향상에 연쇄 효과를 줄 수 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은 지난해 말 131개 장래 개발계획을 신규 발굴해 KDI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예타 기간 연장으로 새롭게 발굴한 수요가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예타 초반 0.171로 측정됐던 비용대비편익(B/C)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DI가 이달 중 1차 예타보고회를 열면 예타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타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힘을 실어준 만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지역 10면

춘천에 軍자녀 자율형공립고 생기나

국방부-교육부, 한민고에서 고교 설립 업무협약
비용 책임 지자체 ... 시 “세부정책 보고 방침 결정”

【춘천】속보=국방부와 교육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를 지속 건의해 온 춘천시(본보 1월23일자 10면 보도)에 새로운 학교 모델이 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파주 한민고에서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이 열린 한민고는

2017년 개교한 군인 자녀 학교로 신흥 명문으로 불린다. 전교생 기숙사 체제를 갖췄고 학생 70%는 전국에서 군인 자녀를 뽑고 나머지 30%는 광역단위로 일반 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고교 역시 한민고를 모델로 한다.

춘천시는 해체된 102보충대 부지 활용을 바라는 주민 여론을 고려, 해당 부지에 한민고와 유사한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해 달라고 국방부와 육군 2군단에 건

의해 왔다.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자치도 특성에 따라 도내 군인 자녀 고교 설립 필요성이 크고 철원, 화천, 양구 등 부대 밀집지와 춘천이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점도 당위성으로 제시됐다. 이번 협약에서도 국방부 측에서 춘천의 군인 자녀 고교 설립에 대한 관심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와 교육부 협약은 학교 설립 형태가 자율형 공립고로 정해진 만큼 비용 책임을 지자체가 져야 해 재원 부담이 앞설 수밖에 없다.

춘천시가 파주 한민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기숙사를 갖춘

고교 설립을 위해선 부지 매입 비용을 포함해 1,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장 국방부와 교육부가 2026년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기존 고교의 전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으나 학교 전환의 경우에도 춘천지역 공립고는 춘천고, 춘천여고, 봉의고 등 3개에 그쳐 시의 입장에서 검토 대상조차 충분치 않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신입생 모집 계획에 맞추려면 상반기 내로 세부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확인한 후 시의 방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지역 11면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실마리 찾았다

태장농단 숙원 해결 8전투비행단 활주로 연장
중대형 항공기 취항 가능 국제공항 단조 마련

【원주】원주시가 원주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태장농공단지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주목된다.

원강수 시장은 본보와의 신

년 인터뷰에서 “올해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시민과의 약속인 ‘경제제일도시 원주’ 조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원주 경제가 강원수출을 견인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국제공항 설립이

중부내륙권 경제도시 도약의 지름길이라는 구상에서다.

더욱이 웰니스 관광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시는 각 부서별로 이미 국제공항 필수 시설인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설치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원주태장농공단지는 인근에 있는 공군 8전투비행단으로 인

해 수십년간 고도제한에 묶여 공장 시설의 증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비행단의 활주로를 450m 연장하는 것을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시는 활주로가 늘어나면 중대형 항공기와 수송기의 취항이 가능해져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활주로 연장에 필요한 800억원 규모의 사업

비에 대해서도 관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 가능성이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국제공항은 수도권 서브공항과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수십년간 고도제한으로 고통받은 태장농공단지의 숙원 해결이 반대급부로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가능성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3일 (수)

사설/칼럼 19면

장성광업소 원형 보존 타당하다

-일방적인 수몰 추진 파국 초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환 필요

태백지역에서 6월 말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의 원형 보존을 기반으로 한 광해 복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 용역 결과물이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장성광업소 수몰'로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11일 장성광업소 활용 여지를 없애버리는 수몰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건의문을 보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해복구대책으로 내놓은 갯내 수몰은 '무책임한 결론'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유물을 수몰한다는 계획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하 갯내시설은 한번 수몰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만큼 활용 방안을 찾고 사업·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며 산업적, 관광적, 군사용, 방호·방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 활용을 촉구했습니다. 조기 폐광으로 남겨지는 광산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온전한 장성광업소의 보존'을 기초로 한 광해복구가 답이라고 강조합니다.

장성광업소의 원형 보존 기반 활용 방법은 비단 태백지역뿐만 아니라 지

역대학과 폐광지 4개 시군 민간 학술문화단체에서도 줄곧 주장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2020년 8월 폐광지역 활성화센터, 태백탄전문화연구소, 정선산업문화유산연구소, 영월탄광문화연구소, 탄전문화연구소, 강릉원주대학교 링크사업단이 결집해 '강원도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2021년에는 전국 범위로 확대돼 '한국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강원 탄전지대는 석탄산업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로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현대산업사의 보물창고입니다. 석탄은 '산업화의 쌀'로 불렸습니다. 광업인은 '산업전사'로 희생과 헌신이 부여된 시대였습니다. 서독행 파견 광부의 출발점도 강원입니다. 파독광부훈련소는 삼척도계에 처음 설치됐고 이어 장성에서 운영됐습니다. 석탄유산은 처분해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일본을 비롯해 유럽에서 석탄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 명소이자 일자리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석탄산업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은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형 보존은 등재의 핵심사안입니다. 일방적 수몰을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사설/칼럼 19면

외국인 '동반자'로 인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내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공개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 외국인 인구는 2만7,494명으로 10년 전보다 56.5% 늘어났다. 전국 증가율은 절반인 29%였다. 외국인들의 도내 거주 이유를 알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인원을 보면 고용허가제(E-9)가 5,0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 비자(D-2)가 4,108명으로 그다음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과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빈약해 보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됐다. 외국인 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정책은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앞으로 우리는 식당, 주요 관광지 리조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근로 여건이나 임금, 의식주 등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농사일과 중소기업 일에 전념하라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다. 도내 농촌과 기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다. 입출국을 비롯해 교육, 인력 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외국 유학생들이 몰려드는 추세는 해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활약과 한류 콘텐츠의 세계 확산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다. 대학들이 현지에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나선 것도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교육에서 그칠 뿐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해 주요 산업 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 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0명 중 4명꼴밖에 안 된다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역 대학과 지방의 생존을 위한 대안이다. 해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유학 온 우수 인재들이 졸업 후 취업과 함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만만찮은 과제지만 성실한 외국 근로자와 유학생 정착을 유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낼 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관리 체계를 더 고도화할 때가 됐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3일 (수)

사설/칼럼 19면

글로벌대학 예산 '짊꺼 지원' 안돼

-5년 1000억원 불구, 첫째 대학별 수십억대 그쳐

지역 대학한 곳에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30사업에 지난해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가 선정됐습니다. 대학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계획에 힘입어 발전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지역 사회와 동문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1도 1국립대'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1차 연도였던 지난해 지원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의 우려는 큼니다. 행여 정부가 대학 통합과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 취지를 살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 규모와 속도입니다. 사업 1차 연도였던 지난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두 대학을 합쳐 80억원을 교부받았고, 한림대는 50억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5년 동안 1000억원 지원을 약속했던 교육부 계획과 비교하면, 총사업비의 10%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차기연도 예산 교부 역시 미뤄지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입니다. 당초 교육부가 글로벌대학들에게 안내한 컨설팅 종료 시점은 2월이

었습니다. 완료 후 2차 연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지연되면서 예산 교부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에 작은 규모의 예산만 교부되는 이유는 교육부가 결정한 사업 방침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당초 제시한 실행 계획을 실제로 진행하는지를 검토한 이후, 예산을 충분히 교부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줬다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사업 초기일수록 인프라 구축과 인력 추가 채용 등에 활용할 예산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1~2차 연도에는 적은 예산을 교부하기로 해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준비 단계에 가까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학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 방향을 납득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상 중·후반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대학 선정 과정에서 내세웠던 지역 대학 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합니다. 행여 지역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목표만 달성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3일 (수)

사설/칼럼 19면

환자 뒷전인 ‘醫·政’ 갈등,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마지노선을 정해 ‘역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나머지 ‘빅5 병원’ 교수들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혀 의정(醫政) 갈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다음 주 의료대란 양상이 최악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동맹휴학에 돌입한 강원지역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각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 움직임에 대해 개

강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개강을 미루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환자를 불모로 벌이는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을 여기서 그쳐야 한다. 의사의 힘은 보살핌을 받는 환자에게서 오며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 인력들의 피로가 한계를 맞춘 지 오래다.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환자 곁에서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즉, 정부 정책에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태도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집단행동이 목적인 바를

이룬 사례가 세계 역사 어디에 있는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하려고 공무원들이 전공의들의 집으로 일일이 찾아가기도 했다. 대한민국 어떤 지역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이런 공을 들인 적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 달라는 절절한 호소나 다름없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으며 불안해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임산부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유

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의료 파행도 날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집단사직서 제출

동맹휴학 강원지역 의대생들 집단유급 현실화

정부와 의사단체, 당장 대화부터 시작해야

의사들은 환자들의 수술, 치료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는 상황에 환자와 가족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도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의사로서 윤리와 도덕성을 강그리 내팽개치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집단투쟁을 벌이는 것은 노조의 불법 파업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다. ‘의대 증원 백지화’만 내세우며 외곽으로 치닫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국민의 원성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환자들을 팽개친 이들의 제 몫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비과학적 수요조사 반대’라는 주장을 압도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